

##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,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

- 작년 2035 NDC 수립 이후 주요 탈탄소 전환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, 햇빛이음학교(학교태양광) 사업 추진계획 점검·논의
- 위원회 산하 한국형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 발표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9일(금) 17:00,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창훈 민간위원장(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)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\*(이하 기후대응위)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.

\*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·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·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·의결기구(舊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)

□ 회의에 앞서,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. 이번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8명으로, 국민 추천을 거쳐 기후에너지·공정전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,

○ 특히 세대 간 기후 정의 실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청년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고, 여성위원의 참여 비중을 높였다.

\* ▲청년(8.3% → 17.2%) ▲여성(38.9% → 48.3%)

□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목표(NDC) 수립\* 이후 전력·산업·건물·수송 등 부문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.

\* '35년까지 '18년 대비 53%~61% 온실가스 감축

○ 아울러, 전국 국·공립 초·중·고등학교 전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과 기후대응위 산하에 설치되는 한국형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의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김민석 총리는 “작년 2035 NDC 수립 이후 재정투자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태양광·전기차 보급 확대 등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지만,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.”며,
  - “탈탄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, 올해 예정된 부문별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수립하고,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  - 또한, “학교 태양광 보급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탄소중립·에너지 전환 실천 교육의 장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나, 유지·관리 등 학교 현장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현장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.”고 밝혔다.
  - 마지막으로, “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로,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.”며, “국민이 단순 정책수용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나서는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을 기대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이날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, “실질적인 국민 참여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기후시민회의가 제안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  - 또한, “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기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부처 간 이견 조율, 면밀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이행을 책임있게 견인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각오를 밝혔다.
-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먼저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한 이후 전력, 산업, 건물, 수송 등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.
- 전력 부문의 경우,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 확대와 88개 전체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-RE100 추진,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,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 보급이 증가세\*를 보이고 있다.
    - \* ('24.1분기) 780MW → ('25.1분기) 802MW → ('26.1분기) 1,087MW
    -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한편,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.
  - 산업 부문의 경우, 지난해 11월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이후 최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, 녹색 금융 확대,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설비 설치·교체 지원, 기후금융 도입 등 기업의 탄소감축 지원을 확대하였다.
    - 앞으로 정부는 우리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저탄소제품의 시장 창출, 탄소감축 기술개발 전 주기 지원,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  - 건물 부문의 경우,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였고,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 추진 중이다.
    - 향후에는 재생열과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열 에너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.
  - 수송 부문의 경우, 전환지원금 도입 등의 효과로 올해 4월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달성하고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22%를 달성하는 등 최근 가파른 보급 추세를 보이고 있다.
    - 아울러, 모두의 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내연차의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. 전기·수소차의 신차 비중을 2030년까지 40%, 2035년까지 70%로 높이기 위해 경차, 택시, 렌터카 등 분야별 맞춤형 전동화를 지원하고, 선박·건설기계·농기계 등 비도로부문의 전기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.

-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문별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K-GX(한국형 녹색전환)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,
  - 하반기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,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,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,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.

## 2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

- 온실가스 감축 및 학교 전기요금 절감\*, 미래세대 학생 대상 탄소중립·에너지 교육 실천 등을 위해 학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,
  - \* 학교 태양광 50kW 설치 시 온실가스 연간 감축효과 31.49 tCO<sub>2</sub>eq/교, 전기요금 절감효과 10,000천원/교 기대
  - 현재 학교 태양광 설비 보급률은 34.6% 수준이며, 학교 태양광이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어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제약이 있다.
- 이에 교육부는 “햇빛이음학교”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·중·고 4,378교\*에 태양광을 보급하고, 학교를 기후변화·생태전환교육 실천의 장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.
  - \* 전체 국공립 초중고 중 既설치 학교 및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(2,274교), 노후(97교) 학교 제외
  - 우선, 올해에는 국공립 초·중·고 552교에 태양광 설치, 발전정보 통합관리, 안전관리 강화, 교육기반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교육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2026년 11월 햇빛이음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보장하여 본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,
  - 학교 에너지자립 목표(RE20 등)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설비용량과 소비유형을 다양화하고, 교사 역량강화·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육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.
- 기후대응위는 햇빛이음학교와 같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정부의 국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그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.

- 기후대응위는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기후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한다.
  -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·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기후 공론 상설기구로, 기존 공론조사의 단발성·정부 주도·정책반영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다.
- 시민참여단은 지역·성별·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220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, 미래세대, 장애인·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.
  - 또한, 환경교육, 공론화, 갈등관리, 감축정책, 적응정책, 기후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의 의제 선정과 숙의과정을 지원한다.
- 기후시민회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의제 접수, 기획참여단의 의제 선정, 숙의참여단의 학습·토론·권고안 마련 순으로 운영된다.
  - 숙의 과정에서는 사전학습, 소그룹 활동, 전문가 질의응답, 분과별 토론, 종합토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, 논의 과정은 기록·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.
-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 권고안의 정책 반영과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, 기후시민회의 모델을 지역사회와 학교 등 일상 속 풀뿌리 기후공론장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  - 권고안은 10월까지 마련하여 기후대응위 전체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, 이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며, 운영 성과는 평가·환류를 통해 차년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.
  - 아울러 기후시민회의 참여모델을 정립하고 지역·국제사회에 공유하여 한국형 기후시민회의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1.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

붙임 2.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 명단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<br>기획조정국 총괄기획과 | 책임자 | 과 장 | 신강민 (044-200-1916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나찬미 (044-200-1917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사무관 | 황지영 (044-200-1920) |
| <안건1><br><공동> | 기후에너지환경부<br>기후에너지정책과  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| 이상현 (044-201-664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| 류형관 (044-201-6647) |
| <안건2>         | 교육부<br>학교시설개선팀                 | 책임자 | 팀 장 | 조준영 (044-203-6356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윤영찬 (044-203-7133) |
|               | 교육부<br>민주시민교육과                 | 책임자 | 과장  | 황현정 (044-203-6612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주형 (044-203-6538) |
| <안건3>         | 기후대응위 사무처<br>기후시민정책과  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| 임현교 (044-200-1969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정민 (044-200-1970) |



- (법적 근거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  - (성격) 대통령 소속 민·관 합동 심의·의결기구
  - (기능)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·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·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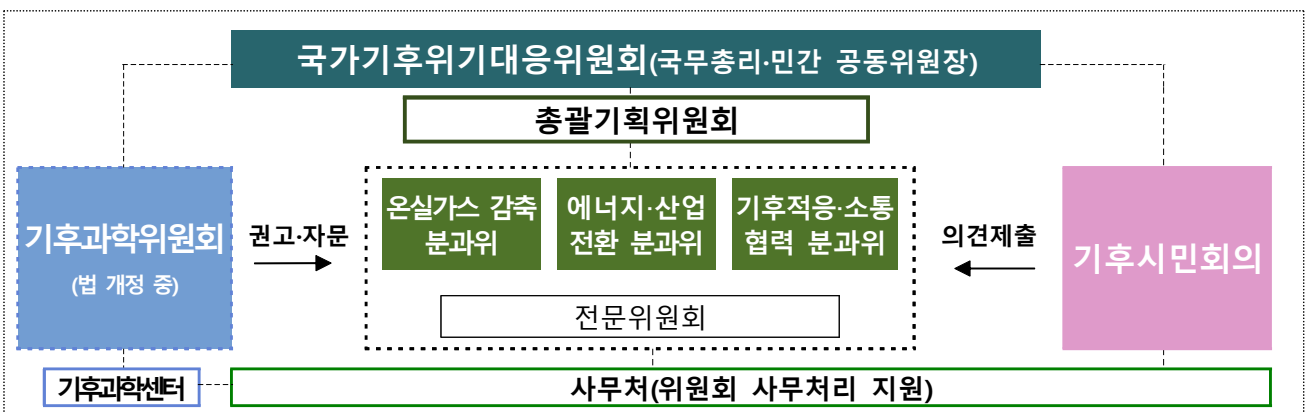
<<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기능(심의·의결) >>

-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**기본방향 수립**
- **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, 국가기본계획**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
- **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**의 수립·변경 및 점검
-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**연구개발,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**
- 탄소중립 관련 **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·소통, 국제협력**

※ (연혁) 녹색성장위원회('09.2~'22.3) + 2050 탄소중립위원회('21.5~'22.3)  
 →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'22.3~'25.12) → **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('26.1.1~)**

- 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2명(국무총리·민간 공동)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
  - (정부위원) 2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\* + 지자체장 1명(시도지사협의회 추천)
    - \* 재정·교육·과기·외교·통일·행안·문체·농림·산업·복지·기후·노동·성평등·국토·해수·중기부, 기획처, 방미통·금융위, 기상·산림청, 국조실(간사)
  - (위촉위원) 기후과학, 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예방·적응, 에너지·자원, 녹색기술·산업, 기후재정·금융,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 전문가(대통령 위촉)
    - \*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

< 위원회 구성도 >



□ 위촉직 29명

| 구 분 |             | 현 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| 위<br>촉<br>직 |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창훈<br>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            |
| 2   |             | 온실가스<br>감축 분과<br>( 9 )          | 김송민<br>황영감농원 공동대표                |
| 3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현아<br>닥터일렉(주) 대표이사              |
| 4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혜미<br>플랜1.5 정책활동가               |
| 5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태준<br>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             |
| 6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영환<br>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        |
| 7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오대균<br>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             |
| 8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명주<br>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              |
| 9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영탁<br>건국대전력시장·신기술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    |
| 10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수열<br>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          |
| 11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너지산업<br>전환 분과<br>( 10 )         |
| 12  |             | 김성욱<br>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반부장 직무대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 |             | 김지윤<br>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 전임운영역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 |             | 김혜애<br>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 |             | 오기웅<br>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 |             | 조은애<br>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 |             | 조홍종<br>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  |             | 지현영<br>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  |             | 한병화<br>유진투자증권 이사, 그린산업 애널리스트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  |             | 허경선<br>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  |             | 기후적응·<br>소통협력<br>분과<br>( 9 )    | 김성찬<br>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매니저 |
| 22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소윤<br>클라이밋 대표                   |
| 23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류기섭<br>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          |
| 24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박정연<br>(사)지역에너지기후행동 파트너십도약 대표    |
| 25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형범<br>충남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           |
| 26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윤성복<br>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       |
| 27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명훈<br>(주)케이씨리버텍 대표이사            |
| 28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윤화<br>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     |
| 29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옥<br>봉원중학교 교사                  |